당원들 야유·몸싸움 속 "외연 확대 안하면 공멸" 목청

호남 찾은 안철수 대표 통합론 설파

조선대서 '연대·혁신 토론회'
천정배·박주선·김동철 불참
엇갈린 광주민심 "사퇴" "환영"
박지원, 安지지자에 계란 맞기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 예산 정국 이후 첫 행보로 호남을 택했지만, 반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통합 논의에 반발 여론이 높은 호남을 방문해 직접 승부를 보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엿보였지만, 여전히 당원 간 갈등의 골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안 대표는 '호랑이굴'에 직접 들어가 호남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광주·전남을 찾았지만, 대부분 시간을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강조했다.

9일과 10일 이틀째 광주·전남을 방문중인 안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회장 안팎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당원과 안 대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계란 세례를 받았다.

안 대표는 10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서석홀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연대와 혁신을 위한 토론회'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광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을 뿐 호남권 중진 의원으로 분류되는 천정배·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철수 대표와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대는 총선에서 가능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여러 후보를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바른정당은 적폐세력이 아니며, 결국 대안은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정상화할 비전을 제시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3가지 비전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변화하지 않는 정치 이념에서 탈피해야 하며, 인물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통합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른정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이 영남당이라고 하는데 11명 국회의원 중 7명이 수도권이며, 1명은 호남, 영남은 3명 뿐이며 바른정당은 적폐세력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0일 오전 지역구인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마라톤대회에서 참석자가 던진 계란을 맞고 얼굴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는 연대-통합 혁신을 위한 당원 토론회' 장소인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 입구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측과 통합을 지지하는 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면서 "신뢰가 이뤄진 정당과 통합해야 하며, 과거 통합진보당 통합 과정처럼 이질적인 정당 간 통합이 실패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일부 당원들이 행사장 입구를 막고 "도덕성을 상실한 지도자를 따를 수 없다. 안철수 탈당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안 대표 지지자들과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무안에서 열린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통합론을 통한 당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안 대표는 "3등만 계속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 2등, 더 나아가 1등이 될 비전과 포부를 가져야 하지만 외연 확대 방법이 많지 않다"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전남 방문에서 안철수 대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계승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대표는 10일 오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마라톤대회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안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창당하면서 '합리적 중도 개혁 노선' 강조했는데 이 노선을 가져오는 게 나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대중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박지원 전 대표가 안 대표를 지지하는 60대 여성으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통합 내분에 DJ 비자금 허위 제보 사건 '일파만파'

입지 좁아진 安대표…통합론 힘 빠지나

바른정당과 통합론을 놓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당이 2008년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안철수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허위사실로 결론 난 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안 대표 측 인사로 통하는 박주원 당 최고위원으로 보도된 뒤 그에 대한 비난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박 최고위원은 자신의 말대로 즉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검찰 등 수사로 이 추악한 정치공작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10년 주 전 의원을 통해 제보자가 박주원 전 정보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왜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박 최고위원은 불법정치공작에 가담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최고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또 "당이 진상조사를 통해 출당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하라"며 전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힘을 싣던 박 최고위원이 궁지에 몰리면서 안 대표의 중도통합론 역시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안 대표는 10일에도 호남에서 통합론 행보를 계속했다.

안 대표는 지난 9일 무안 전남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진실을 규명하는 대로 엄중하게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지방선거 체제 조기 전환…본격 세몰이

8~9일 광역단체장 평가 작업
尹시장 "광주형 일자리 등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13일로 중앙당 및 시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이 종료되면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기획본부(가칭)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본부 산하에 전략, 정책, 공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을 두고, 중앙당 차원의 핵심 공약과 지방선거 전략 등을 발굴하고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기구도 구성, '후보자 선정 로드맵' 등 공천 기준과 경선 규칙 등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이 조기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권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동력으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탓에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 입법에는 이렇다 할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북 핵 실험 등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해 경제와 민생 등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야권이 몰락, 여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는 정부·여 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9일 이틀 동안 윤장현 광주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론조사 30%에 더해 공약이행(20%), 자치분권 활동(15%), 직무활동(35%) 등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하위 20%에 포함된 광역 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를 감점 받는다.

윤 시장은 지난 8일 중앙당에서 열린 평가심사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애니지밸리산업 추진 등 광주의 향후 미래 비전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평가후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의 미래비전과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7명이며 이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나머지 단체장들이 모두 경선에 참여한다면 평가 심사 최하위 1명이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평가 결과를 밀봉, 내년 구성되는 공관위(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